

주요국 예산안

예산안 2025

- 기반 강화 및 미래 보장

2025. 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26일에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발표한 '예산안 2025(Budget 2025)'와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한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 박정흠 재정제도분석팀장
김은숙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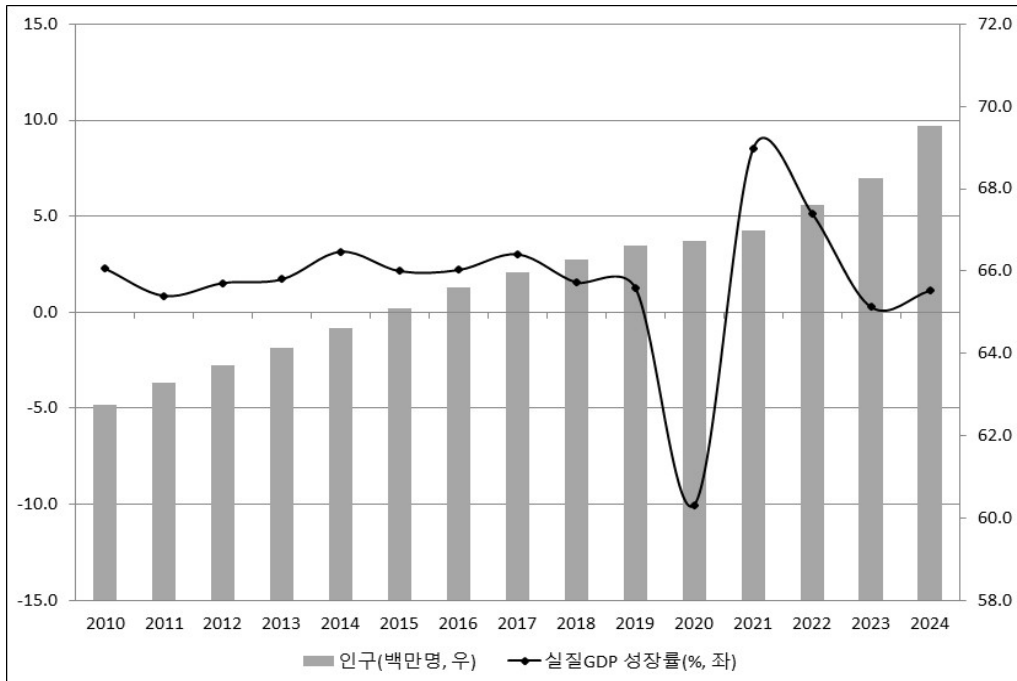
Contents

1	경제 및 재정 전망	1
가.	경제 전망	1
나.	재정 전망	3
2	재정 기초 및 정책 방향	8
가.	재정 기초	8
나.	정책 방향	10
3	수입 및 지출 전망	12
가.	수입 전망	12
나.	지출 전망	15
4	주요 정책	18
가.	기반 강화	18
1)	생활비 부담 완화	18
2)	공공재정 확보 및 세제 개혁	20
3)	공공서비스 -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개혁	22
나.	미래 보장	25
1)	투자 강화	25
2)	기업 지원 및 혁신	27
3)	인재 활용 및 기회 확대	28

영국 개황¹⁾

- 2026-27회계연도: 2026년 4월 ~ 2027년 3월
- 환율: 1파운드 = 약 1,742.68원(2024년 평균)
- 경제규모: 경상 GDP 2조 8,839억파운드(3조 6,859억달러)(2024년 기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62.8%(2024년 기준)
- 인구: 6,952만명(2024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단위: 백만명, %)



자료: OECD.Data Explorer, 2025.12.22. 추출(<https://data-explorer.oecd.org/>)

- 자료:
 - HM Treasury, *Budget 2025*, 2025.11.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 HM Treasury, "Strong foundations, secure future: a Budget that delivers on the country's priorities," Press release, 2025.11.26.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5.12.22.), 경제 규모(Current prices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인구, GDP 성장률은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5.12.22.) 기준

요약 SUMMARY

- (경제 전망) 실질 GDP는 전망기간(2025~2030년)에 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수치
 - 2025년 1.5%, 2026년 1.4%, 2027~2030년 1.5%
- (재정 전망) 2026-27회계연도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1조 3,038억파운드(GDP 대비 41.2%), 총관리지출은 1조 4,159억파운드(GDP 대비 44.7%) 전망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5-26회계연도 4.5%(1,383억파운드)로 하락한 후 2030-31회계연도 1.9%(672억파운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 95.0%에서 2028-29회계연도 97.0%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2030-31회계연도 96.1%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 기초)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추이를 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다른 G7 국가 대비 큰 폭의 재정건전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
 - 기초재정수지 적자: (2025-26) 1.5% → (2030-31) -1.4%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2025-26) 1.1% → (2030-31) -1.4%
- (정책 방향)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
 - (생활비 절감)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을 가구당 평균 150파운드 할인하고, 30년 만의 철도요금 동결 및 유류세 임시 인하 5개월 추가 연장 등을 통해 통근자와 운전자 부담을 경감
 - (NHS 대기자 명단 축소 및 필수 공공서비스 보호) 공공투자를 줄이는 긴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 40년 만 최고 수준의 공공투자를 유지
 - (채무 감축) 현재 공공지출 10파운드 중 1파운드가 채무 이자로 지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fiscal rule)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명한 지출, 복지개혁, 공정한 세제를 통해 매년 차입을 줄여 재정여력(fiscal headroom)을 확대
 - (경제성장 가속화) 1,200억파운드 이상의 공공투자 확대, 국부기금(National Wealth Fund) 조성 등 기존 정책에 더해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
 - (공정한 세제 마련)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개인세(소득세, 국민보험기여금) 부과 기준액 동결을 연장하고, 부동산세·배당세·저축 소득세는 2%p 인상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간 세금 격차를 줄이며, 소득이 적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공제도 마련
 - (복지개혁) 2026년 4월부터 두 자녀 제한(two-child limit)을 전면 폐지하는 역사적 결정을 통해 45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구제

1 |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는 전망기간(2025~2030년)에 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수치

- 2025년 성장률은 3월 전망 대비 0.5%p 높은 1.5%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4년 하반기에 생산성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를 기록했기 때문
 - 2025년 1분기 강세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인지세 기준 변경 및 관세 인상에 대비한 가계·기업의 일시적인 선집중적(frontloading) 거래에 기인
- 중기 전망의 3월 대비 하향 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OBR이 중기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3월 대비 0.3%p 낮은 1.0%로 조정했기 때문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3.5%로 상승한 후 2026년에는 2.5%로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는 3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4%p 상향 조정된 수치

- 이번 상향 조정은 서비스 물가 상승세의 강한 모멘텀과 2025년과 2026년의 임금 상승 기대가 마이너스 아웃풋 갭(negative output gap) 전망 보다 크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달성은 3월 전망 대비 1년 늦은 2027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2년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7년까지 현재 수준인 약 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고용률은 전망기간에 약 6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실업률의 경기 순환적 하락이 다음 두 가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구조적 하락, 질병 관련 사유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 (가계)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RHDI) 성장률은 2024-25회계연도 3%에서 전망기간에 평균 약 0.25%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3월 전망 대비 다소 낮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

- 1인당 RHDI 성장률 둔화는 중기 실질임금 증가율 둔화와 세금 인상이 주된 원인

〈 표 1 〉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p,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GDP 성장률	1.1	1.5	1.4	1.5	1.5	1.5	1.5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0.1	1.0	1.0	1.2	1.1	1.1	1.1
잠재성장률	1.6	1.8	1.3	1.3	1.3	1.5	1.5
산출갭(잠재 GDP 대비 %)	-0.3	-0.6	-0.5	-0.2	-0.1	0.0	0.0
GDP 주요 구성요소							
- 가계소비	-0.2	0.9	1.2	1.5	1.6	1.8	1.7
- 일반정부소비	3.4	2.0	2.2	1.8	1.3	1.2	1.7
- 고정투자	1.8	2.2	1.3	3.1	2.5	1.5	1.4
· 기업투자	2.3	2.8	-0.4	0.6	0.9	1.2	1.4
· 일반정부투자	4.1	2.5	7.8	5.4	-0.2	-1.3	0.2
· 민간주택투자	-1.4	1.0	1.4	6.8	7.7	4.1	2.0
- 재고 변화(%p) ¹⁾	0.1	0.0	0.0	0.0	0.0	0.0	0.0
- 수출	0.7	3.3	0.4	0.3	0.5	0.8	0.9
- 수입	2.6	3.7	0.2	1.3	1.3	1.1	1.1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5	3.5	2.5	2.0	2.0	2.0	2.0
고용자 수(백만명)	33.6	34.2	34.3	34.6	34.9	35.1	35.4
실업률	4.3	4.8	4.9	4.6	4.3	4.2	4.1
생산성(시간당 산출량)	0.3	0.7	0.7	0.8	0.8	0.9	1.0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성장률 ²⁾	3.0	0.5	0.3	0.2	0.3	0.3	0.4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2) 각 수치는 연도별 수치가 아닌 2024-25회계연도~2030-31회계연도의 수치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82, Table A.1, 재구성

나

재정 전망

»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4-25회계연도에 1조 1,386억파운드(GDP 대비 38.9%)에서 2030-31회계연도에 1조 5,394억파운드(GDP 대비 4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²⁾(〈표 2〉, 〈표 3〉 참고)

- 총관리지출은 2024-25회계연도에 1조 2,881억파운드(GDP 대비 44.0%)에서 2030-31회계연도에 1조 6,066억파운드(GDP 대비 4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2024-25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차입은 GDP 대비 약 5%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5년 연속 높은 비율이 예상되나, 2030-31회계연도에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표 2〉, 〈표 3〉, 〈표 4〉 참고)

- (순차입)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4-25회계연도 5.1%(1,495억파운드)에서 2025-26회계연도 4.5%(1,383억파운드)로 하락한 후 2030-31회계연도 1.9%(672억파운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 3월 전망과 비교하면, 2024-25회계연도 120억파운드(GDP 대비 0.4%), 2025-26회계연도 210억파운드(GDP 대비 0.7%) 증가한 것이나, 2029-30회계연도에는 60억파운드(GDP 대비 0.2%) 감소한 수치

- ◆ 특수교육(SEND)³⁾ 관련 지방정부 지출 증가, 장애 관련 수급자 수 확대, 물가 상승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중기적으로 차입 전망을 상승시킴
- ◆ 한편, 두 자녀 제한(two-child limit)⁴⁾ 폐지 등의 정책 결정은 단기적으로 차입을 확대하나, 개인세 부과 기준액(personal tax threshold) 동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서 2028-29회계연도 이후 차입 증가분을 상당 부분 상쇄

- 2025-26회계연도와 2030-31회계연도 사이에 예상되는 약 2.7%p의 차입 감소 중 3분의 2는 수입 증가*, 나머지 3분의 1은 지출 감소**에 기인

* 개인세 부과 기준액 동결로 인한 소득세 증가, 자본세 증가

** 후반 몇 년 동안 GDP 대비 부처별 자원지출(경상지출) 증가율 감소, 감염 혈액 및 우체국 금융 전산망 오류 관련 보상과 같은 일시적 지출 종료

- (경상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경상재정수지 적자는 2024-25회계연도 1.7%(520억파운드)

2) 수입 및 지출 전망의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 pp.12-17의 '3. 수입 및 지출 전망'을 참고

3) 특수교육을 뜻하는 SEND는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의 약자로, 학습·행위·이해·집중력 또는 신체적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교육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시스템을 의미

4) 2017년 4월에 도입된 영국의 복지 규정으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나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 정부 수당을 한 가족 내 처음 태어난 두 자녀까지만 지급하도록 제한한 정책

*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

에서 감소하여 2028-29회계연도에 흑자로 전환되고, 2029-30회계연도에는 250억파운드 (GDP 대비 0.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및 순금융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8-29회계연도에 각각 97.0%, 83.7%로 정점에 이르나, 이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표 2〉 참고)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95.0%에서 2028-29회계연도에 97.0%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2030-31회계연도에는 96.1%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30-31회계연도의 순채무 비율 감소는 주로 영국 중앙은행의 일회성 대출 상환(one-off set of loan repayment)⁵⁾에 기인
 - 전망기간 평균 순채무 비율은 지난 3월 대비 1.5%p 더 높게 전망되며, 이는 단기 차입 증가가 주된 요인
- (순금융 부채)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는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83.1%에서 2028-29회계연도에 83.7%까지 상승한 후 2030-31회계연도에는 8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표 2 〉 주요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30-31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a)	38.9	40.5	41.2	41.8	41.9	42.3	42.4
총관리지출(TME)(b)	44.0	45.0	44.7	44.8	44.5	44.3	44.3
공공부문 경상지출(c)	39.1	39.8	39.7	39.5	39.4	39.3	39.3
공공부문 순투자(d)	2.5	2.8	2.6	2.9	2.7	2.6	2.5
감가상각(e)	2.4	2.4	2.4	2.4	2.5	2.5	2.5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5.1	4.5	3.5	3.0	2.6	1.9	1.9
경기조정 순차입	4.9	4.2	3.2	2.8	2.5	1.9	1.8
경상재정수지 적자(c+e-a)	2.6	1.7	0.9	0.1	-0.1	-0.6	-0.7
경기조정 경상재정수지 적자	2.4	1.4	0.6	0.0	-0.2	-0.6	-0.7
기초재정수지 적자	2.3	1.5	0.6	0.1	-0.5	-1.3	-1.4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2.1	1.1	0.3	-0.1	-0.6	-1.3	-1.4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¹⁾	93.6	95.0	95.3	96.3	97.0	96.8	96.1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88.1	91.3	92.8	94.2	95.2	95.3	95.3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 ²⁾	81.3	83.1	83.3	83.6	83.7	83.0	82.2
국제 비교							
일반정부 순차입	5.8	5.0	4.1	3.6	3.2	2.6	2.4
일반정부 총채무	99.8	101.4	103.1	104.1	104.9	105.0	104.8

주: 1)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2)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 학자금 대출, 금융위기 동안 인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등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90, Table A.9, 재구성

5) 영국 중앙은행이 과거 양적 완화(QE)를 위해 설립한 자산매입기금(APF)과 관련된 채무를 재무부가 일시적으로 대규모 청산하는 회계적 이벤트

〈 표 3 〉 주요 재정지표 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30-31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a)	1,138.6	1,231.5	1,303.8	1,370.3	1,420.7	1,483.3	1,539.4
총관리지출(TME)(b)	1,288.1	1,369.8	1,415.9	1,468.7	1,507.6	1,551.2	1,606.6
공공부문 경상지출(c)	1,145.3	1,210.7	1,256.0	1,295.0	1,333.7	1,375.6	1,425.7
공공부문 순투자(d)	73.6	85.9	83.3	93.9	90.9	89.6	91.7
감가상각(e)	69.1	73.2	76.5	79.9	83.1	86.0	89.2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149.5	138.3	112.1	98.5	86.9	67.9	67.2
경기조정 순차입	144.0	127.2	102.2	93.1	84.7	67.2	67.0
경상재정수지 적자(c+e-a)	75.8	52.4	28.8	4.6	-3.9	-21.7	-24.6
경기조정 경상재정수지 적자	70.3	41.3	18.9	-0.8	-6.1	-22.4	-24.7
기초재정수지 적자	66.6	45.8	20.3	2.2	-18.5	-45.5	-49.3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61.1	34.7	10.4	-3.1	-20.7	-46.1	-49.4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¹⁾	2,810.1	2,940.3	3,069.7	3,211.0	3,340.9	3,451.8	3,546.3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2,644.6	2,825.3	2,988.1	3,137.9	3,278.8	3,397.8	3,518.9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 ²⁾	2,438.9	2,570.2	2,682.8	2,787.7	2,882.4	2,958.5	3,033.7
국제 비교							
일반정부 순차입	149.5	138.3	112.1	98.5	86.9	67.9	67.2
일반정부 총채무	2,925.3	3,114.9	3,273.2	3,420.7	3,559.9	3,678.5	3,799.4

주: 1)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2)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86, Table A.5; p.188, Table A.7; p.190, Table A.9;
 _____, Public finances databank - November 2025, 2025.11.26, 재구성

〈 표 4 〉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변화 - 2025년 3월 전망 vs. 11월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30-31
2025년 3월 전망(a)	137.3	117.7	97.2	80.2	77.4	74.0	-
2025년 11월 전망(b)	149.5	138.3	112.1	98.5	86.9	67.9	67.2
차이(b-a)	12.1	20.6	14.9	18.3	9.5	-6.2	-
- 선조치로 인한 차이	-	16.8	11.0	7.1	8.9	5.5	-
· 수입	-	-1.4	-12.4	-16.0	-15.0	-14.0	-
· 지출	-	18.2	23.5	23.1	24.0	19.5	-
-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	-	3.7	5.9	9.9	-1.0	-14.8	-18.0
· 조세 정책 결정	-	-1.3	-0.7	-6.1	-13.9	-26.1	-29.8
(개인세)	-	0.0	-0.3	-1.0	-5.7	-15.0	-17.9
(기타)	-	-1.3	-0.4	-5.0	-8.2	-11.1	-11.9
· 지출 정책 결정	-	4.9	6.6	16.0	12.9	11.3	11.8
(복지 패키지)	-	1.8	2.2	3.9	5.6	6.9	7.9
(기타)	-	3.1	4.3	12.1	7.3	4.4	4.0
- 정책 결정의 간접적인 영향	-	0.2	-2.0	1.3	3.9	5.2	5.4
· 수입	-	0.1	1.1	2.2	3.5	4.1	3.7
· 채무 이자 지출	-	0.2	-2.7	0.8	1.8	1.4	1.2
· 기타 지출	-	-0.2	-0.3	-1.7	-1.4	-0.2	0.5
- SEND 관련 지출 조정	-	0.0	0.0	0.0	-2.3	-2.2	-1.3

주: SEND는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의 약자로, 학습·행위·이해·집중력 또는 신체적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교육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시스템을 의미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40, Table 6.1, 재구성

» (재정준칙에 대한 성과 분석⁶⁾) 예산책임청(OBR)은 정부 정책 하에서 재정 목표(재정준칙)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

- (재정준칙)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Autumn 2024)에 재정 목표(fiscal mandate)로 재정수지 준칙을, 보완적 목표(supplementary target)로 채무 준칙과 복지지출 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음
 - (재정수지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경상재정수지는 흑자
 - (채무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
 - (복지지출⁷⁾ 한도)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은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6) 예산책임청(OBR)은 예산책임헌장에 따라 정부 정책 하에서 재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한도(1,945억파운드)와 마진(margin)(97억파운드) 이내로 관리

- (성과 분석) 분석 결과, 재정 목표와 보완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나타남
 - (재정수지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경상재정수지는 GDP 대비 0.6% 흑자로, 217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준칙은 충족될 것으로 평가
 - ◆ 달성 확률은 59%로, 지난 3월 전망 대비 5%p 상승
 - (채무 준칙) 2029-30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GDP 대비 0.7%(244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됨에 따라 채무 준칙 역시 충족될 것으로 평가
 - ◆ 달성 확률은 52%로, 지난 3월 전망 대비 1%p 상승
 - (복지지출 한도) 2029-30회계연도의 복지지출은 2,023억파운드로, 19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지출 한도가 충족될 것으로 평가

〈 표 5 〉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

(단위: %, 십억파운드)

구분	평가	GDP 대비 비율		규모		달성 가능성
		전망	마진	전망	마진	
2029-30회계연도 경상재정수지	충족	0.6	0.6	21.7	21.7	59
2029-30회계연도 공공부문 순금융 부채의 전년 대비 변화	충족	-0.7	0.7	-	24.4	52
2029-30회계연도 복지지출	충족	-	-	202.3	1.9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62, Table 7.1, 재구성

〈 표 6 〉 재무부가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단위: %, 십억파운드)

구분	2025-26	2026-27	2027-28	2027-28	2029-30
복지지출 한도	-	-	-	-	194.5
이행경로	166.8	172.6	179.0	186.4	-
마진(%)	1.0	2.0	3.0	4.0	5.0
마진	1.7	3.5	5.4	7.5	9.7
이행경로+마진	168.5	176.0	184.4	193.8	204.2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67, Table 7.2

7) 복지지출 한도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은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 Support Allowance), 소득지원 (Income Support),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보육비지원(Tax Free Childcare) 등 25개

2 |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가

재정 기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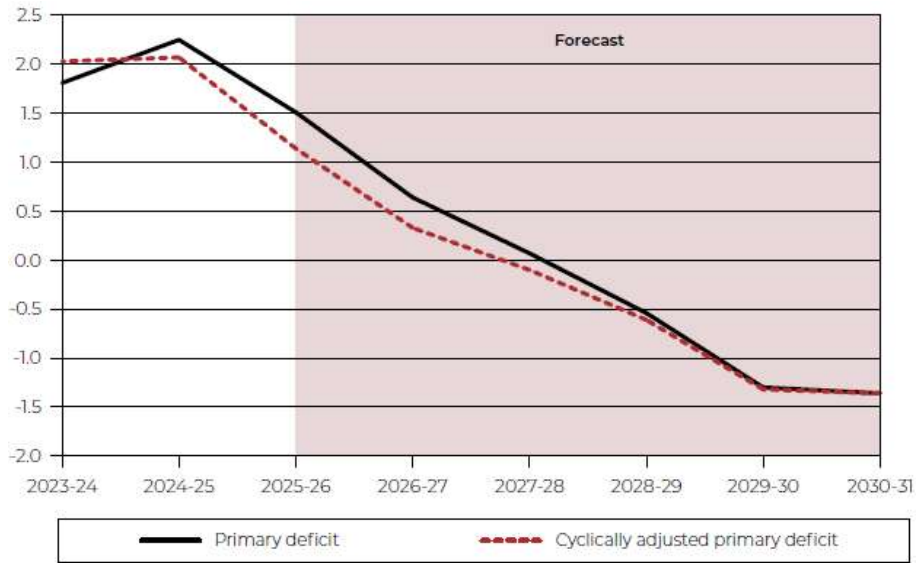
- » 레이첼 리브스 재무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은 긴축(austerity)이나 무모한 차입을 지양하고, 채무를 감축하며, NHS 대기를 줄이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⁹⁾
- »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추이를 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다른 G7 국가 대비 큰 폭의 재정건전화(consolidate)를 이룰 것으로 전망
 - (기초재정수지 적자) 2025-26회계연도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중단 이후 나타난 첫 감소에 해당
 -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5-26회계연도와 2027-28회계연도 동안 1.4%p 더 감소하고 이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1-02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흑자에 해당
 - 2030-31회계연도까지 1.4%의 흑자가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건전화는 수입 증가(2/3)와 지출 감소(1/3)에 의해 주도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망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8-29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8) 재정정책은 경제에 수요를 추가하거나(확장적 재정 기조) 줄여(긴축적 재정 기조)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재정 기조(fiscal stance)는 순차입, 기초재정수지 적자,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등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9) "Those are my choices: Not austerity; Not reckless borrowing; But cutting the debt, cutting waiting lists, cutting the cost of living."

〈 그림 1 〉 재정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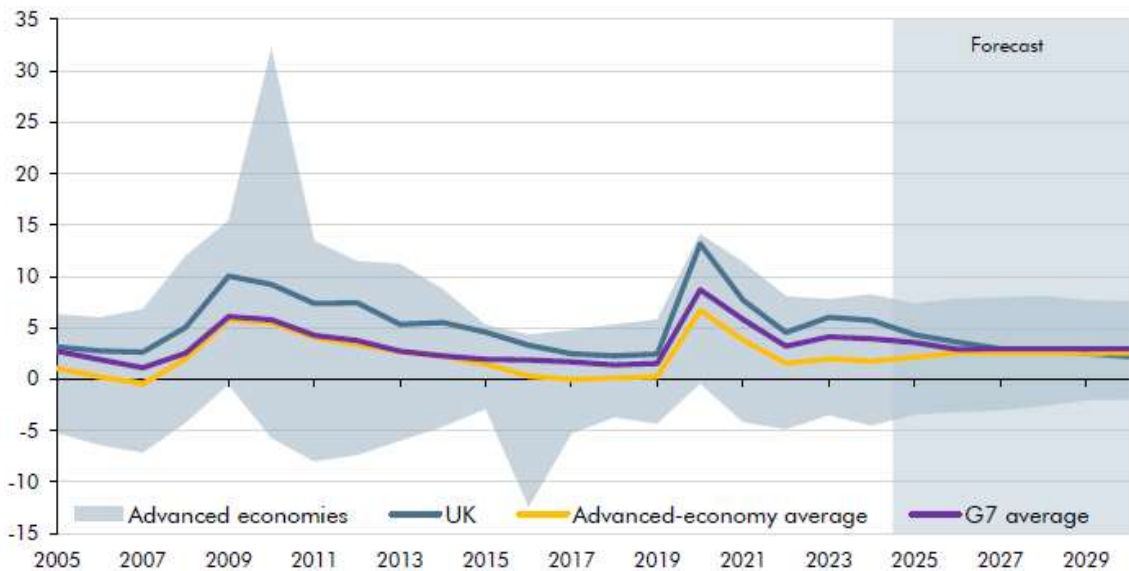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5*, 2025.11, p.16, Chart 1.4

〈 그림 2 〉 일반정부 순차입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58, Chart 6.12

나

정책 방향

» 영국 정부는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보도자료¹⁰⁾를 통해 다음 여섯 가지를 강조¹¹⁾

- (생활비 절감)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을 가구당 평균 150파운드 할인하고, 30년 만의 철도요금 동결 및 유류세 임시 인하 5개월 추가 연장 등을 통해 통근자와 운전자 부담을 경감
 -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의 연봉을 최대 1,500파운드 인상하고, 연금 트리플 락¹²⁾ 유지를 통해 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575파운드를 추가 지급
- (NHS 대기자 명단 축소 및 필수 공공서비스 보호) 공공투자를 줄이는 긴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 40년 만 최고 수준의 공공투자를 유지
 - NHS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여 대기자 명단을 23만명 이상 축소하고, 250개의 새로운 지역 보건소(Neighbourhood Health Centre)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개선
 - 치안 및 범죄 위원회 위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및 5,000명의 지방의원(councillor) 폐지(abolish) 등을 통해 정치 비용을 절감하고 공적 자금의 낭비를 방지
- (채무 감축) 현재 공공지출 10파운드 중 1파운드가 채무 이자로 지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fiscal rule)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명한 지출, 복지개혁, 공정한 세제를 통해 매년 차입을 줄여 재정여력(fiscal headroom)을 확대
- (경제성장 가속화) 1,200억파운드 이상의 공공투자 확대, 국부기금(National Wealth Fund) 조성 등 기존 정책에 더해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
 - 국부기금은 경제 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강국 만들기, 국방 부문 강화 등을 위해 조성된 전략 기금으로, 70억파운드 규모의 정부 출연 자본(경제 자본 한도, economic capital limit)을 기반으로 총 700억파운드 이상의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
 - 소매업 및 숙박업 부동산 75만개소에 대한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여 주요 상권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세제 혜택 및 ISA 개혁 등을 통해 민간 투자와 주식 시장 투자를 증진
 - 런던의 템즈미드(Thamesmead) 지역으로 도클랜드 경전철 노선을 연장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건설하는 등 주요 인프라 및 주택 프로젝트를 지원

10) HM Treasury, "Strong foundations, secure future: a Budget that delivers on the country's priorities," Press release, 2025.11.26.

11) 주요 정책의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 pp.18-29의 '4. 주요 정책'을 참고

12) Triple Lock: 영국의 국가연금(State Pension)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도 평균 임금 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

- (공정한 세제 마련)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개인세(소득세, 국민보험기여금) 부과 기준액 동결을 연장하고, 부동산세·배당세·저축 소득세는 2%p 인상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간 세금 격차를 줄이며, 소득이 적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공제도 마련
 - 200만파운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 고가주택 지방세 추가 부담금(High Value Council Tax Surcharge, HVCTS)을 부과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
 -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주행 거리당 부과금(levy)을 2028년에 도입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등 현대 경제에 맞게 세제를 개편
- (복지개혁) 2026년 4월부터 두 자녀 제한(two-child limit)을 전면 폐지하는 역사적 결정을 통해 45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구제
 - 장기 실업 청년에게 수당 대신 일자리를 보장하고, 모타빌리티(Motability)¹³⁾ 개혁을 통해 15억파운드의 세금을 절감

13)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량, 스쿠터, 전동 휠체어 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선단체 및 제도를 의미

3 | 수입 및 지출 전망

가

수입 전망

»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4-25회계연도에 1조 1,386억파운드(GDP 대비 38.9%)에서 2030-31회계연도에 1조 5,394억파운드(GDP 대비 4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표 7〉 참고)

- 2024-25회계연도부터 2030-31회계연도까지 예상되는 GDP 대비 3.5%p의 경상수입 증가는 개인세(2.3%p)와 자본이득세·상속세·부동산취득세 등의 자본세(0.7%p)가 주된 요인
 - 올해 개인세 증가는 주로 2024년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고용주의 국민보험 기여금 요율 인상 및 부과 기준액 하향 조정)에 따른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 증가에 기인
 - 임금 상승과 함께, 개인세 부과 기준액 동결 조치가 2031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개인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본세 수입은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과 2024년 가을 예산안을 통해 이루어진 상속 및 자본이득세 인상으로 인해 예측기간 전반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민계정 조세수입 비율)은 2024-25회계연도에 34.7%에서 2030-31회계연도에 사상 최고치인 38.3%까지, 3.6%p 증가할 것으로 전망(〈그림 3〉 참고)
 - 조세부담률 증가에 개인세(2.3%p)와 자본세(0.7%p)가 가장 크게 기여
- 2026-27회계연도 공공부문 경상수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약 3,590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환급분 포함)¹⁴⁾ 2,200억파운드, 국민보험기여금 2,140억파운드, 법인세 1,040억파운드 등의 순(〈그림 4〉 참고)

14) 부가가치세에는 환급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분류체계 상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재정지출로 분류되어 수입에서도 제외되지 않기 때문임(〈표 8〉 참고)

〈 표 7 〉 공공부문 경상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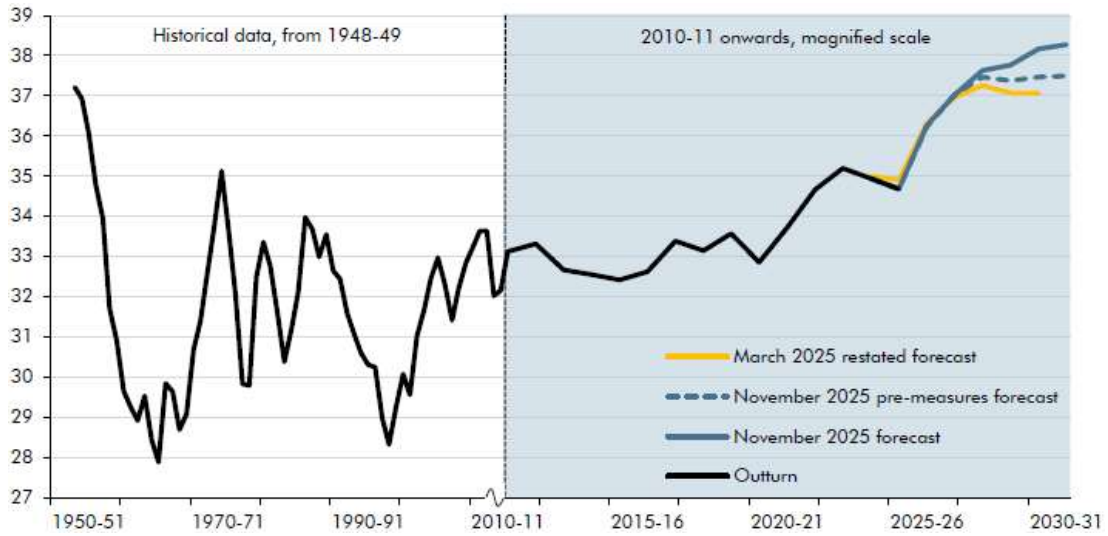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30-31
소득세	305.9	329.0	358.9	383.0	393.4	410.9	426.9
국민보험기여금(NICs)	171.4	205.4	213.7	220.7	228.2	239.2	247.2
부가가치세	173.3	179.6	188.9	198.0	205.7	214.8	224.0
법인세	94.9	98.8	104.2	110.0	114.1	117.8	122.8
석유세	-0.4	-0.5	-0.2	-0.2	-0.1	-0.1	-0.1
유류세	24.4	24.0	24.2	26.2	26.3	26.0	25.3
비주거용 재산세	32.1	33.6	37.1	38.0	38.8	41.9	42.0
지방세(Council tax)	47.4	50.9	53.6	56.6	60.1	63.3	66.7
부가가치세 환급	29.4	30.5	31.4	32.7	33.4	34.4	35.9
자본이득세	13.7	20.3	19.8	21.8	24.8	27.3	29.8
상속세	8.3	8.7	9.5	11.1	12.6	13.5	14.5
부동산취득세	15.2	16.4	19.2	21.6	24.1	26.3	28.0
주식취득세	4.3	4.4	4.6	4.8	5.0	5.1	5.3
담배세	7.9	8.0	7.8	7.7	7.5	7.2	7.0
주세	12.5	11.9	12.3	12.8	13.2	13.7	14.1
항공여객세	4.1	4.6	5.2	5.6	5.9	6.2	6.5
보험료세	8.9	9.0	9.2	9.4	9.7	9.9	10.1
기후변화세	1.8	1.8	1.8	1.7	1.7	1.8	1.9
은행세(Bank levy)	1.3	1.4	1.4	1.4	1.4	1.4	1.4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0	1.1	1.2	1.3	1.3	1.4	1.4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4.1	4.4	4.6	4.7	4.9	5.0	5.2
디지털서비스세	0.8	1.0	1.1	1.2	1.3	1.3	1.4
기타 국제(HMRC taxes)	10.2	11.2	11.6	12.7	13.4	14.3	14.7
자동차소비세	8.2	9.4	10.0	10.4	11.9	12.6	13.4
면허료 수입	3.8	3.9	4.0	4.0	4.0	4.0	4.1
환경부담금	10.5	14.0	15.9	15.4	16.0	16.9	18.6
배출거래제	3.4	2.6	3.0	3.0	2.6	2.5	2.3
에너지 이익 부담금(황제세)	2.7	2.4	1.7	1.6	1.4	1.1	0.2
전력 발전 추가부담금	0.7	0.0	0.0	0.0	0.0	0.0	0.0
기타 조세	12.9	15.6	16.3	16.3	17.1	17.6	18.0
국민계정 조세수입	1,015.0	1,103.3	1,171.9	1,233.2	1,279.4	1,337.2	1,388.3
이자 및 배당	42.8	42.5	43.7	45.6	46.6	48.6	50.5
총운영수지	78.3	82.8	85.3	88.4	91.5	94.2	97.2
기타수입	2.5	2.9	2.9	3.0	3.2	3.2	3.4
경상수입	1,138.6	1,231.5	1,303.8	1,370.3	1,420.7	1,483.3	1,539.4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86, Table A.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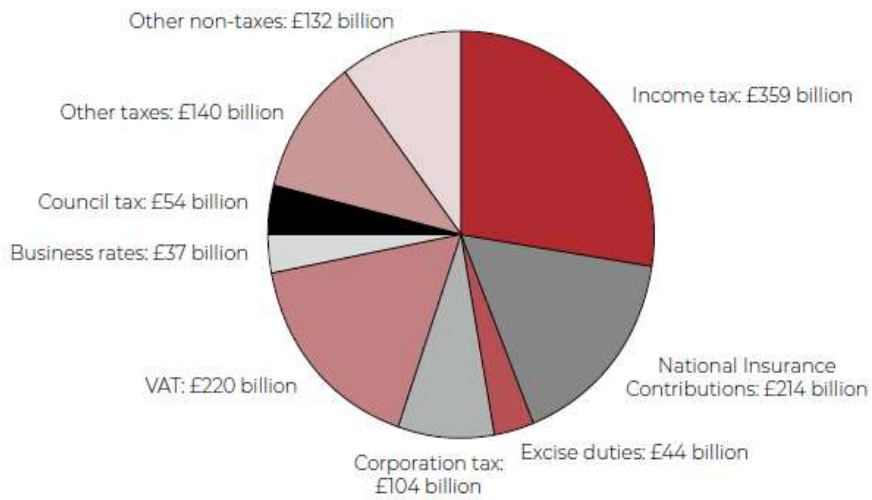
〈 그림 3 〉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90, Chart 4. 1

〈 그림 4 〉 2026-27회계연도 유형별 공공부문 경상수입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5*, 2025.11, p.145, Chart D.1

나

지출 전망

- »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은 2024-25회계연도 1조 2,881억파운드(GDP 대비 44%)에서 2025-26회계연도 1조 3,698억파운드(GDP 대비45%)로 상승한 후 2030-31회계연도에 1조 6,066억파운드(GDP 대비 44%)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전망기간(2026-27회계연도~2030-31회계연도)의 공공지출 변화는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 관리 지출(AME)¹⁵⁾ 모두의 변화에 기인(〈표 9〉 참고)

 - GDP 대비 부처별 지출한도는 2024-25회계연도 20.5%에서 2027-28회계연도 21.2%로 상승한 후 2030-31회계연도 20.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전망 후반부의 감소세는 자원이출이 2027-28회계연도 17.2%에서 2030-31회계연도 16.8%로 감소하고, 자본지출 또한 2027-28회계연도 4.1%에서 2030-31회계연도 3.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
 - GDP 대비 연간 관리 지출은 2024-25회계연도 23.6%에서 2025-26회계연도 23.9%로 증가한 후 2030-31회계연도 23.7%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전망기간의 감소는 주로 감염 혈액 및 우체국 금융 전산망 오류 관련 보상과 같이 단기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한시적 지출 감소와 비적립형 공공부문 연금제도(unfunded public service pension scheme)¹⁶⁾의 흑자 증가에 기인
 - ◆ 이러한 감소는 복지지출 및 채무이자 지출의 예상 증가분을 상쇄
 - 2026-27회계연도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호가 4,000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보건 2,940억파운드, 교육 1,450억파운드, 채무 이자 1,350억파운드 등의 순(〈그림 5〉 참고)

15)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특징이 있음

16) 적립기금 없이(go-pay-as-you-go) 당해연도 재정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공공부문 연금제도를 의미

〈 표 8 〉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30-31
공공부문 경상지출							
자원 DEL	493.8	525.1	546.5	562.4	578.4	589.1	609.0
자원 AME	651.5	685.5	709.6	732.5	755.2	786.5	816.7
복지지출	314.7	333.0	351.9	362.1	372.9	389.4	406.2
지방재정 경상지출	69.3	75.3	76.7	81.0	79.2	83.8	87.2
중앙정부 총 채무 이자 (APF 채무 이자 삭감)	105.7	113.7	113.3	118.7	127.7	136.6	140.4
스코틀랜드정부 경상지출	5.4	6.8	7.7	7.8	7.9	7.5	7.6
EU분담금	0.9	0.9	0.9	0.4	0.8	0.0	0.1
순공공서비스연금 지출	0.9	-0.3	-2.2	-2.5	-3.0	-3.0	-3.8
기업 및 기타 세액공제	10.2	11.1	11.5	11.6	11.9	12.2	12.5
BBC 경상지출	4.2	4.2	4.3	4.3	4.3	4.4	4.4
국가복권 경상보조금	1.4	1.4	1.3	1.2	1.3	1.3	1.3
일반정부 귀속연금	1.8	1.9	2.0	2.1	2.1	2.2	2.2
공기업 채무 이자	0.5	0.5	0.5	0.5	0.5	0.5	0.5
비가정용 에너지 지원	0.0	0.0	0.0	0.0	0.0	0.0	0.0
가정용 에너지 지원	0.0	0.0	0.0	0.0	0.0	0.0	0.0
공공부문 연금제도 지원	18.4	19.7	20.7	21.7	22.7	23.8	25.0
감가상각	60.8	64.8	67.7	70.8	73.8	76.5	79.5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25.1	26.1	26.8	28.0	28.4	29.3	30.6
환경부담금	13.2	15.0	19.1	18.0	18.6	17.0	18.5
기타 경상지출	8.7	9.7	7.9	7.8	7.7	7.1	7.2
기타 회계 조정	10.5	1.7	-0.4	-0.9	-1.4	-2.1	-2.6
공공부문 경상지출	1,145.3	1,210.7	1,256.0	1,295.0	1,333.7	1,375.6	1,425.7
공공부문 투자							
자본 DEL	110.1	117.6	122.6	132.8	132.4	133.7	137.5
자본 AME	32.6	41.5	37.2	40.9	41.6	41.9	43.4
지방재정 자본지출	9.4	9.2	8.9	8.4	9.6	9.6	10.8
공기업 자본지출	14.9	14.0	15.2	15.1	15.1	15.1	15.1
학자금 대출	9.0	9.2	3.1	8.7	8.6	8.6	8.7
공공부문 연금제도 지원	0.7	2.6	1.8	0.6	0.6	0.6	0.6
세무소송	0.7	0.4	0.4	0.4	0.4	0.4	0.4
기타 자본지출	-1.1	4.5	5.8	5.6	4.9	5.2	5.3
기타 회계 조정	-1.0	1.6	2.0	2.1	2.3	2.4	2.6
공공부문 투자	142.7	159.1	159.8	173.8	174.0	175.6	180.9
감가상각 공제	-69.1	-73.2	-76.5	-79.9	-83.1	-86.0	-89.2
공공부문 순투자	73.6	85.9	83.3	93.9	90.9	89.6	91.7
총관리지출	1,288.1	1,369.8	1,415.9	1,468.7	1,507.6	1,551.2	1,606.6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88, Table A.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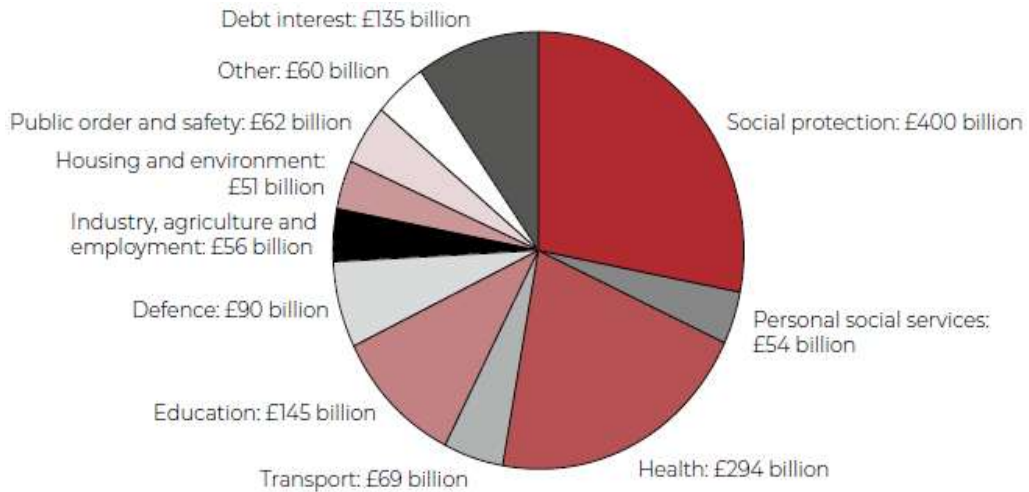
〈 표 9 〉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항목별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2030-31
총관리지출	44.0	45.0	44.7	44.8	44.5	44.3	44.3
- 부처별 지출한도	20.5	21.1	21.1	21.2	21.0	20.6	20.6
·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	16.8	17.3	17.3	17.2	17.1	16.8	16.8
·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	3.7	3.9	3.9	4.1	3.9	3.8	3.8
- 연간 관리 지출	23.6	23.9	23.6	23.6	23.5	23.6	23.7
· 복지지출	10.8	10.9	11.1	11.0	11.0	11.1	11.2
· 채무이자(APF 제외)	3.6	3.74	3.6	3.6	3.8	3.9	3.87
· 지방재정 지출	2.7	2.8	2.7	2.7	2.6	2.7	2.7
· 공기업 지출	0.5	0.5	0.5	0.5	0.5	0.4	0.4
· 공공부문 순차입 중립 지출 ¹⁾	3.4	3.5	3.6	3.6	3.6	3.5	3.5
· 기타	2.4	2.5	2.1	2.2	2.1	2.0	2.0

주: 1) 일반정부 감가상각비, 부가가치세 환급액 및 환경부담금으로 정의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11, p.112, Table 5.1

〈 그림 5 〉 2026-27회계연도 기능별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5*, 2025.11, p.146, Chart D.2

4 | 주요 정책

가 | 기반 강화

1) 생활비 부담 완화

» (고물가 대응) 물가 상승의 근원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교통비, 의약품비 등 일상적 지출을 억제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

- 2026년 4월부터 에너지 요금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가구당 평균 약 150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난방비 할인 제도(Warm Home Discount)¹⁷⁾를 확대
 - 2026-27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재생에너지 의무제¹⁸⁾에 따라 가정용 에너지 요금에 부과되는 부담금 중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현재 에너지 요금으로 지원되는 에너지기업 의무제¹⁹⁾는 폐지
 - 난방비 할인 제도 확대를 통해 이번 겨울 총 600만 가구가 에너지 요금 150파운드를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
- 연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주택 계획(Warm Homes Plan)²⁰⁾에 2025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 2025)에서 배정된 132억파운드 외에 15억파운드를 추가 투자
- 가계 지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 중 철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1년간 정부가 규제하는 잉글랜드의 철도요금을 동결
 - 가장 비싼 노선 기준으로 평균 승객이 연간 300파운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경우, 리터당 5펜스 인하 조치를 2026년 8월까지 연장하고, 이후 세율은 2027년 3월까지 2022년 3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복귀
 - 또한 2026-27회계연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계획은 취소

17) 1회성으로 전기요금 150파운드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공급업체에서 자동으로 요금에 할인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며 할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18) Renewables Obligation: 전력 공급사들에게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제도로, 운영 비용은 전력 공급사에 의해 충당되며, 이 비용은 다시 최종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의 전기 요금에 반영

19) Energy Company Obligation: 에너지 빈곤 퇴치와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대형 에너지기업에게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단열, 난방 교체 등)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20) 가정의 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둠.

- 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4월부터 1년간 처방약 비용을 동결하고, 단일 처방약 가격은 9.9파운드로 유지되어 환자들은 총 약 1,200만파운드를 절약

〈 표 10 〉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와 효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	가구당 생활비 절감 효과
에너지 요금 인하	2026-27회계연도, 가구당 평균 약 150파운드
난방비 할인 제도 확대	올해 겨울, 600만 가구에 150파운드 할인
철도요금 동결	2026-27회계연도 잉글랜드 지역의 가장 비싼 노선 기준, 철도요금 300파운드 절감
버স্য요금 상한 3파운드, 2027년 3월까지 연장	잉글랜드 지역 5,000개 노선에서 요금 부담 완화
유류비 인하	2026-27회계연도, 유류비 89파운드 절감
처방약 본인부담금 동결	2026-27회계연도 잉글랜드 기준, 환자 부담 1,200만파운드 절감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5*, 2025.11, p.31.

» (취약가구·저소득층 지원) 장기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 하고, 근로 장려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재정 안정을 지원

-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해 통합급여의 자녀요소(Child Element)에 적용되는 두 자녀 제한을 폐지
- 2026-27회계연도에 2,000개 학교가 신규 참여하는 무료 조식 클럽(free breakfast club) 1단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부모가 통합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학생으로 무료 급식 자격을 확대하여 약 1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
- 통합급여의 기본금액인 표준수당(Standard Allowance)은 통합급여법 2025(UC Act 2025)에 따라 2026년 4월에 6% 이상 인상
 - 통합급여의 건강요소(Health Element) 개혁과 함께 이러한 인상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 즉,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급여 수급자가 노동 시장에 복귀할 때 급여가 급격히 감소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의회 임기 동안 트리플 락을 유지하여 1,200만명 이상의 국가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지원
 - 이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액은 평균 주급 상승률에 연동해 4.8% 인상되어, 수급자격에 따라 연간 최대 575파운드까지 연금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2026년 4월부터 시간당 12.71파운드로 4.1% 인상
 - 이는 최저생활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약 900파운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 24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해당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2) 공공재정 확보 및 세제 개혁

» (전국민의 부담 분담) 정부는 경제 안정과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나, 소득세·국민보험기여금·부가가치세 등의 기본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제도 운용을 통해 부담을 분산

- 2028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과 기준액과 이에 상응하는 국민보험기여금 부과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속세 부과 기준액은 2031년 4월까지 1년 더 동결
 -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액(Secondary Threshold) 역시 2028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
 - 소득세 및 근로자·자영업자 국민보험기여금 부과 기준액 동결에 따른 수입 중 4분의 3이 소득 상위 50% 가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2029-30회계연도 기준)
- 학자금 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4월부터 3년간 상환 유형 Plan 2의 상환 기준액(repayment threshold)²¹⁾을 2026-27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
 -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는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 수준을 늘리지 않으면서 상환 부담을 높이는 이러한 조치는 비대졸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공정한 조치로 판단

» (공정한 과세 강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서는 부의 원천으로부터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

- (자산 소득 과세) 근로·자영업 소득 대비 낮게 과세되어 온 부동산·배당·저축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격차(tax gap)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보(2029-30회계연도 기준, 약 22억파운드 수입 증가 예상)
 - 2027년 4월부터 부동산 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신설하여 기본세율은 22%, 고세율은 42%, 추가세율은 47%를 적용
 - 2026년 4월부터 배당 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과 고세율을 각각 2%p씩 인상하되, 추가세율은 현행 유지
 - 2027년 4월부터 저축 소득에 대해 모든 과세 구간의 세율을 2%p씩 인상
 - 대다수 납세자와 연금 수급자는 과세 대상 자산 소득이 없어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21) Plan 2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형 중 하나로, 주로 잉글랜드 학자금 지원 기관(Student Finance England)이나 웨일즈 학자금 지원 기관(Student Finance Wales)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적용됨. 영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소득 연계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환 기준액은 대출 상환이 개시되기 위한 최소 소득 수준을 의미. 즉,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기준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이 상환액으로 부과됨.

수입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상위 20% 가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2029-30회계연도 기준)

- (자산 과세) 고가 자산 보유·활용과 관련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고자산층에 편중된 세제 혜택을 조정하여 조세 부담 구조를 정비
 - 2028년 4월부터 잉글랜드 내 200만파운드 이상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가주택 지방세 추가 부담금을 도입
 - ◆ 이는 기존 지방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1% 미만이 과세 대상이 되며, 연간 2,500파운드부터 시작하여 500만파운드 초과 주택은 7,500파운드까지 부과
 - ◆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보전되며, 해당 수입은 지방 서비스 지원에 사용
 - 현재 다수의 민간 전용기가 고세율 항공여객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업 항공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5.7톤 초과 모든 민간 전용기에 고세율 항공여객세 적용 범위를 확대
 - 종업원 소유 신탁(Employee Ownership Trust, EOT) 관련 자본이득세 감면 비율을 양도차익의 100%에서 50%로 축소
 - ◆ EOT는 기업의 소유권을 종업원에게 이전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영국의 간접 주식 소유 제도로, 기업주가 지분의 과반을 종업원 신탁에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
 - ◆ 감면 혜택의 약 절반이 처분 규모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몇 년간 비용(감면에 따른 수입 손실)이 크게 증가

» (현대적 세제 개편) 영국의 경제·기술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의 구조적 조정, 새로운 세목 도입과 기존 세율·과세 방식 조정을 통해 과세 기반을 현대 경제에 맞게 개편

- 전기차 전환 확대로 유류세 수입이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거의 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8년 4월부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기반의 전기차 소비세(Electric Vehicle Excise Duty)를 도입
 - 전기차 운전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일반 휘발유·디젤 차량 운전자가 납부하는 유류세 부담의 약 절반 수준으로 설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감면된 세율을 적용
 - 일반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연간 약 240파운드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가을 예산안에서 정부는 모든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10ml당 2.2파운드의 단일 소비세율을 확정하였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또한 담배세는 소매물가지수에 2%p를 추가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로를 설정
- 주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소매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인상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부담 수준을 유지

- 온라인 도박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활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율을 차등 조정
 - 원격 게임세(Remote Gaming Duty)는 2026년 4월부터 21%에서 40%로 인상
 - 2027년 4월부터 일반 베팅세(General Betting Duty) 내 25%의 원격 베팅 세율(Remote Betting Rate)을 신설하여, 오프라인 베팅과 온라인 베팅 간 세율 차이를 명확히 설정
 - ◆ 다만, 경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격 경마 베팅은 원격 베팅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세율 15%를 유지

» (조세격차 해소) 조세 회피·탈루에 대한 단속 강화, 미납세금 징수 확대, 조세 시스템 현대화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2029-30회계연도에 24억파운드의 추가 수입을 확보

- 조세 회피·탈루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제보자 포상제도를 강화하여, 고액의 조세 회피·탈루 적발에 기여한 정보 제보자에게 보상을 지급
 - 또한 고가 상권·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확대하고, 불법 전자담배(illicit vape) 유통을 단속하며, 파산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부적격 이사에 대한 자격 박탈을 확대
- 미납 세금 징수 확대를 위해 국세청의 채무 관리 업무에 대한 추가 투자와 함께, 조세수입 대비 전체 조세채무(tax debt) 잔액 비율을 매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세채무 전략을 발표
 - 또한 소득세 자진신고 납세자가 연중 정기적인 자동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국세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제3자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사전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세금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세 행정의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을 강화

3) 공공서비스 -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개혁

» (공공서비스·인프라 투자) 지난 해 약속한 국가의료서비스(NHS) 및 자본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이행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 NHS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선택진료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
 -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50개의 신규 지역 보건소 설립을 추진하고, NHS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기술 관련 예산을 확대
- 국방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의회 임기 동안 폭약·탄약(energetics and munitions) 부문에 15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탄약·폭발물 제조를 위한 13개 잠재적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

터 건설에 착수

- 자본 인프라에 투자하여 새로운 교통망 구축, 신규 주택 건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하고, 로어 템스 크로싱(Lower Thames Crossing)²²과 같은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

» **(재정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 및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출 절감
 - 2028-29회계연도에 28억파운드의 효율화 및 절감 목표를 추가 설정하고, 2030-31회계연도에는 49억파운드까지 확대
 - ◆ 이는 2025년 지출검토에서 발표한 연간 약 140억파운드의 효율화 목표와는 별도
 - 치안 및 범죄 위원회 위원과 5,000명의 지방의원 폐지 등을 통해 2030-31회계연도까지 정치 비용 2억 5,000만파운드 이상 절감
 - 2029-30회계연도까지 행정 비용을 16% 절감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현장 서비스에 자원을 집중
- 복지제도 개편 및 노동시장 연계 강화
 - 통합급여 신규 수급자의 건강요소 지급을 축소하여 2030-31회계연도에 28억파운드를 절감하고, 근로 복귀 유인을 강화
 - 모타빌리티 제도가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핵심 목적을 넘어 고가 차량 이용까지 보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세제 혜택을 제한(향후 5년간 10억파운드 이상 절감 예상)
 - ◆ 2026년 7월 이후 신규 계약부터 고가 차량을 임대하기 위해 지불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폐지하고, 제도에 따른 보험 계약에는 보험료세(Insurance Premium Tax)를 표준 세율로 적용

» **(공공서비스 가치 제고) 2027년 지출검토를 앞두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점검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여 더 나은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

- 공공서비스 및 복지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한 표적검토(targeted review)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지출검토의 세부 계획에 반영
- 각 부처에 비상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를 지정하여 외부 전문성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율화 및 절감 가능성을 발굴하고, 2025년 지출검토를 통해 발표한 부처별 효율화 계획을 기반으로 2028-29회계연도까지 약 140억파운드의 기술적 효율화 달성을 추진

22) 남동부 템스강 하루 지역에 건설 예정인 대규모 도로 및 터널 교통망 프로젝트로, 켄트(Kent)와 에식스(Essex)를 연결해 기존 데트포드(Dartford)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항만과 중부·북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사업

- 준정부기관(ALB)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행하여 책임성·효율성·집행력을 제고하고, 차기 지출 검토에 앞서 추가 개편 방안을 마련
- 재무부 차관(Chief Secretary) 주도로 정부 지출 전반에 대한 비용 대비 가치 검토(review of value for money)를 실시하되, 다음에 대한 검토를 포함
 - NHS 및 지역사회 내 새로운 돌봄 모델: 10개년 보건 계획(10 Year Health Plan) 이행의 일환으로, 가능한 곳에서 조기 개입 및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 청소년 지원 서비스: 국가 청소년 전략(National Youth Strategy)의 목표와 부합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지원의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
 - 노숙자 지원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조달 협력을 강화하여, 비용 대비 가치가 높고 질 좋은 임시 숙소와 지원 주택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함
 - 공공자산 유지관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 건물 및 장비의 가치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

나

미래 보장

1) 투자 강화

» (국토계획 체계 개편) 주택 및 핵심 인프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토계획 체계 개편(planning reform)을 추진하고, 입법·사법·행정 전반의 제도 정비와 인력 투자를 통해 국토계획 결정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

- 국토계획 및 인프라 법안(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을 통해 도로·저수지·에너지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동 법안은 기존의 복잡한 인프라 계획·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인프라 사업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처리 속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 이를 통해 도로·저수지·에너지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과정에서 서류상 허가 단계(paper permissions stage)를 폐지하고, 명백히 근거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권을 제한하는 등 사법절차 개편을 통해 국토계획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
 - 사법심사 개편 패키지를 통해 지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의회 임기 동안 150건의 주요 인프라 사업 결정을 신속 처리(fast-tracking)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미 29건의 결정을 완료하여 개트윅(Gatwick) 공항 확장, 이스트 요크셔(East Yorkshire) 태양광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
- 국토계획 전반의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4,800만파운드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잉글랜드에 350명의 계획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고, 중견 인력을 유지·재교육하기 위한 국토계획 전문인력 지원 허브(Planning Careers Hub)를 신설

» (주택 공급 확대) 의회 임기 동안 잉글랜드에 15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저렴주택 투자 확대, 주택 자원 배분, 임대료 제도 개편,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 등을 추진

- 사회·저렴주택 프로그램²³⁾에 대한 390억파운드의 투자와 함께, 160억파운드 규모의 국립주택은행(National Housing Bank) 신설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금융 기반을 마련
- 전국적인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7개 광역시장 전략 당국(Mayoral

23) Social and Affordable Homes Programme: 사회·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장기 주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요 공급 유형으로는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 공유소유주택(Shared Ownership), 부담가능임대주택(Affordable Rent) 등이 포함됨.

Strategic Authority, MSA)²⁴)을 대상으로 주택 재원의 포괄적 통합 배분(integrated settlement)을 실시

- 이는 사업별로 분절된 기존 자원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세부 승인 없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²⁵) 임대료가 공식 임대료(formula rent)에 미달하는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1% 상한을 초과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임대료 수렴(converge) 방안을 검토
 - 이는 임차인 부담과 주택 공급·품질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1월에 최종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
- 국방 주택 전략(Defence Housing Strategy)을 통해 의회 임기 중 15억파운드, 향후 10년간 총 9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국방부 보유·관리 토지(영국 전체의 약 1.4%) 중 유휴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군인·민간 가구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

» (전국 균형 성장) 지역 분권과 광역도시권 중심의 투자·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투자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를 강화

- 광역도시권 성장 촉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시장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 기금 투입 및 비주거용 재산세 보유제(business rates retention)²⁶) 개선 등을 추진
 - 광역시장이 해당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기 방문객에게 관광세(visitor levy)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관광 산업을 포함한 지역 성장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북부·미들랜즈 도시권을 중심으로 4년간 9억 200만파운드 규모의 지역 성장 기금(local growth fund)을 투입하여 광역시장이 지역 성장 계획(Local Growth Plans)에 따라 주요 재개발·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정 광역도시권에서 발생한 비주거용 재산세 수입 중 일부를 해당 지역에 직접 배분하거나 더 많은 수입이 발생된 곳에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비주거용 재산세 보유제 개선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지원
- 현대적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에 따라 모든 지역의 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지원

24) 잉글랜드의 특정 지역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 연합체로, 본문의 7개 광역도시권은 Greater Manchester, Greater London, Liverpool City Region, the North East, South Yorkshire, West Midlands, West Yorkshire

25) 사회·저렴주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의 최소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임대료가 책정되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

26) 중앙정부가 징수한 비주거용 재산세(business rates)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직접 보유·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성장 미션 기금(Growth Mission Fund)을 통해 달링턴 STEM 센터 건립(1,600만파운드), 스코틀랜드 인치그린 조선소 재개발(2,000만파운드), 커폴디 도심·해안 재개발(2,000만파운드) 등 지역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에 재원을 배분
- 런던 템즈미드 지역의 도클랜드 경전철 연장 사업은 주로 런던교통공사(TfL)와 광역런던당국(GLA)의 차입을 주된 재원으로 추진하되, 중앙정부도 장기적으로 재원을 지원
- 청정에너지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영국의 강점을 강화하고 투자 장벽을 제거
 - 2027년부터 영국 산업 경쟁력 계획(Britis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cheme)을 시행하여 자동차·항공우주·화학 등 전력 집약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Wh당 35~40파운드 수준의 전기요금 감면을 제공
 - 와일파(Wylfa) 지역에 영국 최초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사업을 유치하여 최대 3,000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2) 기업 지원 및 혁신

» 혁신·AI·규제개혁·공정경쟁을 통해 기업이 영국에서 창업(start)하고 성장(scale)하며 정착(stay)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생산성과 투자 확대를 도모

-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공 R&D 투자 확대와 대학·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
 - 연간 R&D 투자를 2029-30회계연도까지 226억파운드로 확대하고, 현대적 산업전략에서 선정한 8대 핵심 산업(IS-8)에 4년간 90억파운드를 집중 투자
 - ◆ IS-8: ①첨단 소재 및 공정, 자동화와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 ②해상 풍력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③디지털 및 AI 기술, ④생명 과학, ⑤국방, ⑥금융 서비스, ⑦비즈니스 서비스, ⑧창조 산업
 - 1억 3,000만파운드 규모의 성장 촉진 프로그램, 연구자·여성 창업 지원, 연구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메타사이언스 및 AI 전략(AI for Science Strategy)을 추진
-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확산과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여 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
 - AI 성장구역(AI Growth Zones)²⁷⁾ 및 산업별 AI 확산 책임자(AI Champions) 운영,

27)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우선 접속권 부여,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BridgeAI 프로그램²⁸⁾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의 AI 도입을 촉진

- 전자 송장(electronic invoicing) 의무화, 디지털 연구·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 규제·행정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행정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
 - 의회 임기 내 연간 행정부담 56억파운드 감축을 목표로 규제·보고·세무 절차를 간소화
 - ◆ 계획 및 인프라 법 제정을 통해 잉글랜드 내 150만호 신규 주택 공급과 핵심 인프라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에 연간 약 2억 7,200만파운드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 기업 보고서 작성 면제 대상 확대 등 공시 요건 단순화로 연간 2억 3,000만파운드를 절감하고, 금융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연간 1억파운드 규모의 기업 부담을 경감
-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집행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업이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구축
 - 급증하는 저가 직구 물품(135파운드 이하)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2029년 3월까지 대량 수입품과 동일한 관세 부과 체계를 도입하여 오프라인 상점 및 일반 유통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불법 고용·탈세·자금세탁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불법 상점(미니마트, 이발소 등) 단속을 위해 전담 TF를 신설하고, 조사관 350명 신규 배치 등을 통해 집행 역량을 강화

3) 인재 활용 및 기회 확대

»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과 기술·인재 기반 강화를 통해 전 지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급 인재 유치를 종합적으로 추진

- 취업보장제도(Pathways to Work Guarantee)²⁹⁾를 통해 장애인 및 건강 문제로 실업 상태에 있는 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
-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³⁰⁾ 및 임시숙소 거주자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에 근로 소득 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를 도입하여 취업 또는 근로시간 증가 시 급여 급감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
- 지출검토 기간³¹⁾에 고용·기술 지원 명목으로 15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28) 인공지능(AI) 도입 촉진 프로그램으로, 영국 내 주요 산업(농업·건설·운송·창조산업 등)에서 AI 및 머신러닝(ML) 채택을 가속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29)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이 집중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30)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함께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

31) 2025년 지출검토에 따르면, 부처별 지출한도와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우는 2023-24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우는 2029-30회계연도까지를 의미

진입과 초기 취업 정착을 지원

- 이 중 8억 2,000만파운드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³²⁾에 투입되어 통합급여를 수급하며 18개월 이상 구직 중인 18~21세 청년에게 6개월 유급 직업체험을 보장
- 청년 견습생 지원을 위한 성장기술세(Growth and Skills Levy) 7억 2,500파운드를 활용하여 25세 미만 적격 청년에 대해 중소기업 견습 비용 전액을 지원
- AI·생명과학·청정에너지 등 핵심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고숙련 비자(high-skill visa) 제도를 개편하여 글로벌 인재의 유입 및 정착을 지원

32) 청년(주로 교육·고용·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NEET)에게 실업 상태가 되거나 학교를 떠난 후 몇 달 이내에 적합한 일자리, 계속 교육, 견습 또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 실업을 예방하고, 지원, 기술 훈련 및 근로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